

닭고기 등급제 활성화, 업체 참여도가 관건

◇ 취재 / 김종준 기자/과장
(jjun@poultry.or.kr)

지난 4월 1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9월 현재 체리부로, 농협계육가공분사, 하림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닭고기 등급제 참여로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적인 가공처리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며 고품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신규 창출 및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믿을 수 있는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이런 참여업체들의 반응을 점검해 보았다.

1. 등급판정 시범사업 현황

닭고기 등급판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일일 반출하는 수수는 1,000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체리부호가 시범사업에 참여한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등급판정 수수는 8월말까지 38,190수이지만 실제 반출된 1등급 닭고기는 18,184수로 월별 반출율이 20~70%로 진폭이 나고 있다. 특히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7~8월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되는 닭은 통닭 개별 포장을 준수하고 있으며, 규격은 8호, 10~12호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상태이다. 등급판정 닭의 판매처는 전국 학교, 일부 교도소, 몇 개 수도권 대형매장 및 백화점과 지방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다. 납품가격은 일반닭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급사는 업체당 1명으로 총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등급판정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 업체들이 계상하지 않고 있지만 비용은 처리 업체에 의하면 판매가격의 2~3%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1. 닭고기 등급판정 실적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출현율
1등급	3,689	7,279	28,578	34,683	22,166	96,395	64.54
2등급	725	1,043	11,473	15,947	11,300	40,488	27.12
3등급	7	85	3,131	4,675	4,570	12,468	8.34
계	4,421	8,407	43,182	55,305	38,036	149,351	100

표2.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개황

업체	등급판정 개시일	일일평균 판정수수	규격	판매처
체리부로	4월 1일	200수/일	10,11호통닭	단체급식업체
농협계육기공분사	6월 2일	1,000수/일	12호통닭	농협유통매장
하림	8월18일	200수/일	8,10호통닭	백화점

2. 등급판정 어떤 점이 좋은가?

먼저 등급판정을 실시하면서 등급결과를 이용한 품질이 좋은 제품 생산 유도도 농가 소득 증대 및 사업실시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 측면에서 등급 판정된 닭을 유통한 업체의 경쟁력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닭을 유통하여 회사 이미지를 높이고,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수입닭고기와 차별화하여 수입닭고기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3. 등급판정 업체의 애로점은?

현재 등급 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업체들은 절단육과 부분육의 등급판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닭 개체 포장은 모든 업체가 1등급 닭고기만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점에서 1등급 이외 등급을 취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등급을 받아도 판매가격은 일반 닭과 차이가 없다. 소비자, 유통점 모두 등급 판정한 닭에 대한 가격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기존에 HACCP, ISO, KS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다.

셋째 소비자가 닭고기는 아직까지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 상품으로 인식되어 등급판정의 이점이 적고, 단지 생산원가만 상승시킨다는 점이 업체의 불멘 소리가 있다.

넷째, 등급판정의 시스템이 아직은 시범단계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주문이 한꺼번에 밀릴 때 바로 등급 판정할 체계가 미흡하고, 안정적으로 등급판정을 위한 장소가 협소한 업체도 있다. 즉 선별과 포장이 일원화되지 않았거나 전수검사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4. 소비 매장과 납품업체의 반응은?

백화점과 할인매장의 우선 등급 판정한 닭을 출하하고 있지만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등급 판정 닭고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등급제의 차별화 효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체 급식소는 사정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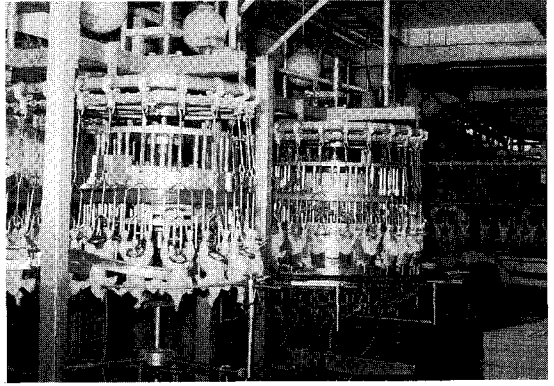
등급판정에 대한 인식이 넓게 인식되어 있어 영양사들이 같은 값이면 등급 판정한 닭고기를 원하고 있으며, 등급 판정한 닭고기 확인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림 이명우 팀장은 등급 판정 닭고기를 단체급식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거나 판매망을

◆ 등급판정 단계



▲ 사육



▲ 도계



▲ 가공



▲ 등급판정



▲ 개별포장



▲ 박스포장



▲ 부분육에 대한 등급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확보한 업체들은 내년 물량 증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5. 등급판정 개선대책은?

1) 등급제 홍보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업체는 자체 조사결과 등급판정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등급판정 닭과 일반닭과의 차별화가 적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회사 브랜드가 주는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고객층이 두텁기 때문이다.

등급판정 닭고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HACCP, ISO, KS 등 인증제와 등급제간 차이점을 소비자에

게 충분히 인식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인증제와 등급제의 차별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2) 등급제 시행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급제 시범사업기간에 생산원가 상승 요인은 스티커작업비, 인건비가 추가되고, 등급판정비는 아직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2~3% 상승되는 부분에 대하여 업체별로 감당하고 있지만 추후 등급판정 물량이 늘어나 등급판정이 본격 시행되면 등급판정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생산원가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물량 증대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모색되어야 해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등급판정소의 견해이다.

한편 농협 목우촌 김희택 과장은 등급판정

닭고기 가격 차별화가 힘들면 등급제 사업 본질을 위해 차등 거래를 위한 공정한 판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활성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 주어 수입개방화 시대에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부분육 등급 규정 도입 시급

시범사업을 하는 3개 업체들이 부분육에 대한 등급 판정을 미루고 있다.

절단육은 등급을 매긴 통닭을 절개한 경우 등급 판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비량이 증가하는 부분육의 등급 규정 없이는 등급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도 규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4) 전수검사와 표본수검사 동시 시행

축산물등급판정소 운영탁 부장은 등급 판정 닭고기가 개별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경우는 전수검사를 해야 되지만 벌크 판매 제품은 표본수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급사들은 표본수 검사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계장 작업자에게 등급판정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등급사는 벌크 단위로 표본 수수를 검사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벌크 유통보다 개별 포장형태 지향

체리부로 조혜정 대리는 벌크 형태보다는 개별 포장형태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등급 판정 차별화 정책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벌크 형태로 납품되면 작업시간이 단축되지만 납품 후 업체간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별 포장을 활성화하자는 의견이다. 단 납품업체별 벌크 유통이 불가피하면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6. 시대변화를 반영한 등급제 되어야

연차별 시범사업기간을 정해두고 이에 대한 평가회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평가회가 없는 것은 시범사업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참여 업체 부족과 등급판정 닭 판매수수가 적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평가회는 시범사업기간의 대부분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등급제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평가회를 통하여 소비자만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등급판정이 아니라 양계농가와 이를 시행하는 계열업체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당위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외관상의 위생이 1등급이더라도 안전성 1등급은 아니므로 외관상 위생 수준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닭고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소·돼지 등급제가 본격 궤도에 진입하는데 10년이 흘렀다고 한다. 닭고기 등급제는 이제 시작이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견된다. 하지만 소·돼지 등급제를 시행할 시기와 소비자 요구 수준이 다르며, 국제농업 무역질서도 완전개방화가 목전에 있다. 이런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닭고기 등급제가 발전하는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양계**